제24호(2017.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꼭 알아야 할
지방자치 정책Brief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응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이슈화

❍ '4차 산업혁명' 부상 이유

– 2016년 1월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은 4차 산업혁명을 중심의제로 제기

– 여기서 4차 산업혁명이 크게 주목 받게 된 이유는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 때문

– 2015~2020년 기간에 새 일자리는 2백만 개 증가하는 반면 7백1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5백10만 개의 일자리가 순수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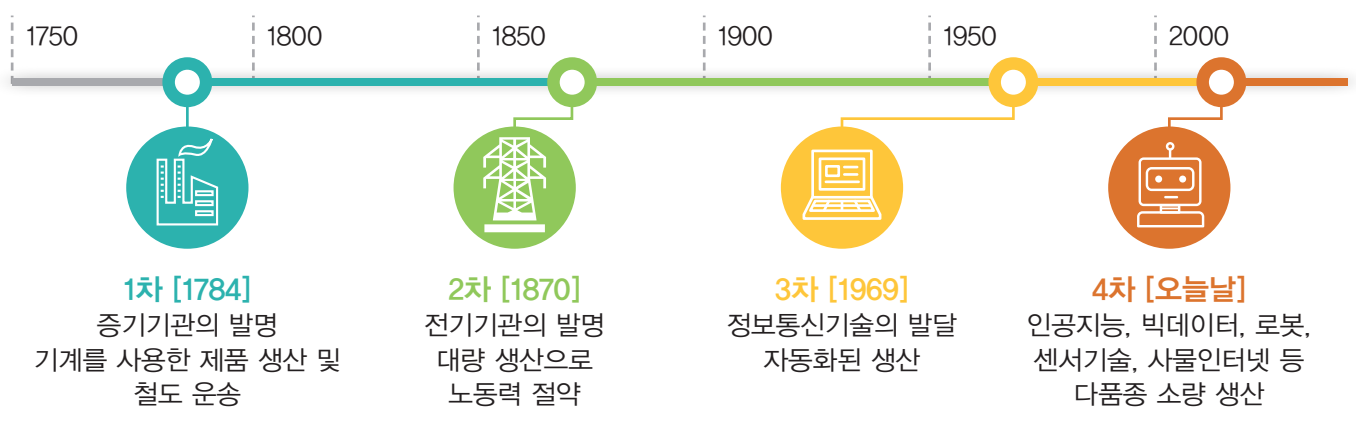
❍ 4차 산업혁명의 개념

–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혁명으로 정의(세계경제포럼, 2016)

– 예를 들면, 영리한 컴퓨터가 사람이 맡는 업무를 대신하고, 스마트폰 등을 통한 원격 조정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물리적인 '거리'의 한계가 사라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의 파급효과가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신중론자도 많음

4차 산업혁명의 전개



* 자료: 세계경제포럼(WEF)

4차 산업혁명 보고서의 일자리 관련 내용과 우리의 상황

❍ 직업별 순고용 증감 예상 : 단순반복적 업무의 감소 예상

– 기존 산업혁명과 같이 기술발달로 인해 단순반복적 업무의 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인공지능의 발달로 기존 서비스 관련 직업까지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

〈WEF(2016)의 2015–2020년 직업별 순고용 증감 현황〉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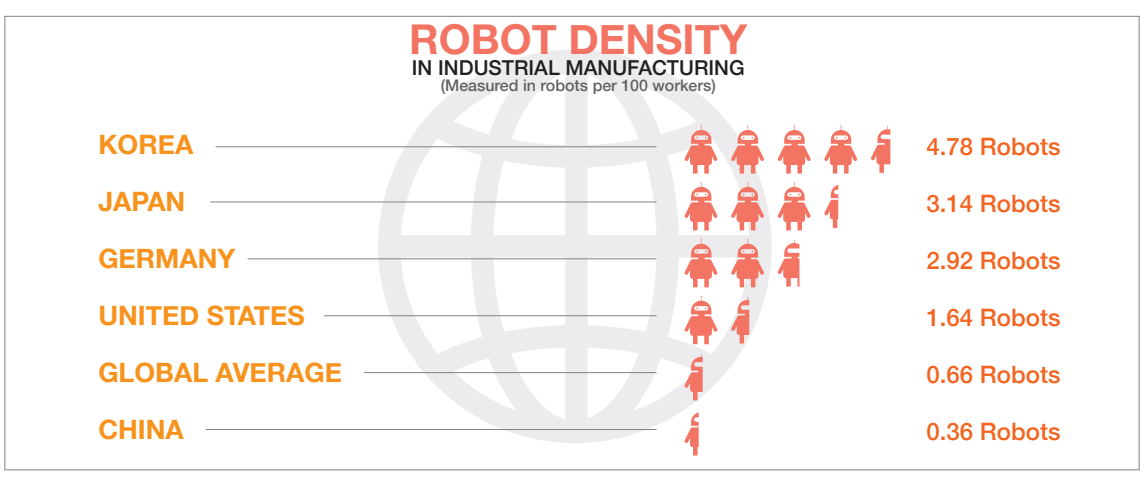
순고용 감소		순고용 증가	
사무/행정	–4,759	사업/재정 운영	492
제조/생산	–1,609	경영	416
건설/채굴	–497	컴퓨터/수학	405
디자인/스포츠/미디어	–151	건축/엔지니어링	339
법률	–109	영업/관련직	303
시설/정비	–40	교육/훈련	66

* 출처: World Economic Forum, The Future of Jobs Survey

❍ 세계 최고수준의 로봇밀도

–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로봇밀도가 가장 높아 제조업 등의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여지는 높지 않고 서비스 직업까지 위협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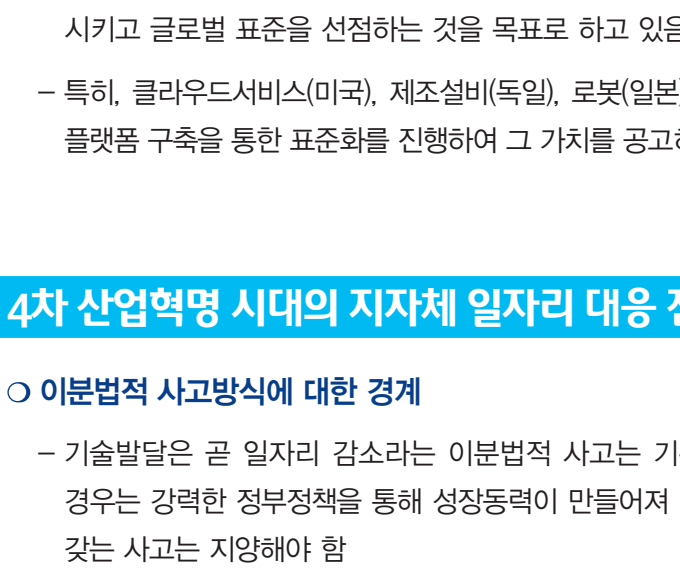
〈전 세계 로봇 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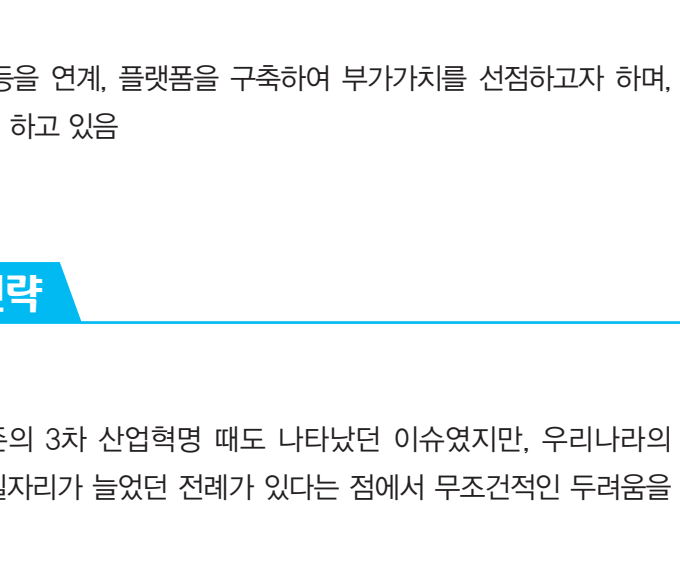


* 출처 : 국제로봇협회(IIFR, 2015)

❍ 근간산업인 제조업의 고전

–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은 경기불황 등 여파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현상과 실업률을 통해 짐작 가능





* 자료 : 통계청

❍ 4차 산업혁명 준비도 부족

– 이슈화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각국은 관련 산업들의 선점을 하려고 부단히 준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5대 요소별 국가 순위〉

순위	국가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수준	교육 시스템	SOC 수준	법적보호	전체
1	스위스	1	4	1	4.0	6.75	3.4
5	미국	4	6	4	14.0	23.00	10.2
12	일본	21	21	5	12.0	18.00	15.4
13	독일	28	17	6	9.5	18.75	15.9
25	한국	83	23	19	20.0	62.25	41.5
28	중국	37	68	31	56.5	64.25	55.6

* 출처: UBS,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an, 2016.

❍ 주요 선진국의 발빠른 대응

–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주요국들은 자국이 경쟁 우위에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플랫폼을 구축하여 타 산업을 종속시키고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특히, 클라우드서비스(미국), 제조설비(독일), 로봇(일본)등을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여 부가가치를 선점하고자 하며, 플랫폼 구축을 통한 표준화를 진행하여 그 가치를 공고히 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자체 일자리 대응 전략

❍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대한 경계

– 기술발달은 곧 일자리 감소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기존의 3차 산업혁명 때도 나타났던 이슈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강력한 정부정책을 통해 성장동력이 만들어져 일자리가 늘었던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두려움을 갖는 사고는 지양해야 함

❍ 기술적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접근방식 지양

–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동력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를 수단적 차원의 기술 발전에만 초점을 둘 경우, 4차 산업혁명은 오히려 사람중심에 대한 정책이 소홀해 질 수 있음

– 즉, 기술발달과 이에 따른 경제성장으로 부의 편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점에서의 정책접근이 필요

❍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및 연계 강화 : 하향식·상향식 방법의 병행 적용

– 기존의 정부정책은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인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리는데 중점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

– 중앙에서는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하향적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해주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일자리 수요 및 지원 요구사항을 중앙에 요청하는 방향으로 정책연계가 강화되어야 함

– 또한 기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중앙부처들의 정책이 중복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

❍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대응 필요

– 일자리 감소우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책도 강화될 필요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대책도 필요

–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생활임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실험중인 정책인 기본소득제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검토 필요

– 경기불황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이 오히려 해가 될 경우를 대비하여 강력한 복지 대책의 수립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 : 사중손실 경계

– 기존의 정책이 일자리 확충에 치중한 측면은 부인할 수 없어, 이러한 결과로 청년일자리 및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는 그리 높지 않았음을 상기하여, 이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즉, 일자리 창출 목표치에만 매몰돼서, 정책을 펴지 않아도 발생할 효과에 비용을 투입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사중손실((死重損失, deadweight loss, excess burden 또는 allocative inefficiency)을 경계해야 할 것임

▶ 내용문의 : 김건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cigma@krila.re.kr, 033–769–9855)

지난호 보기 : "주민참여예산제도"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을까?(이장욱 수석연구원) 원문보기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brief@krila.re.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26464)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반곡동) TEL : 033–769–9822 FAX : 033–769–9805
이메일 : brief@krila.re.kr COPYRIGHT(C) BY KRILA. ALL RIGHTS RESERVED